

중소기업계 “외국인 쿼터제 폐지하고 노동시장 문호 넓혀야”

» 1면 '미이 된 외국인 근로자'서 계속

최저임금 인상·주52시간제 등 부담 ↑
작년 3분기 외국인력 미충원율 24.7%
“다문화 사회 불가피... 정책 변화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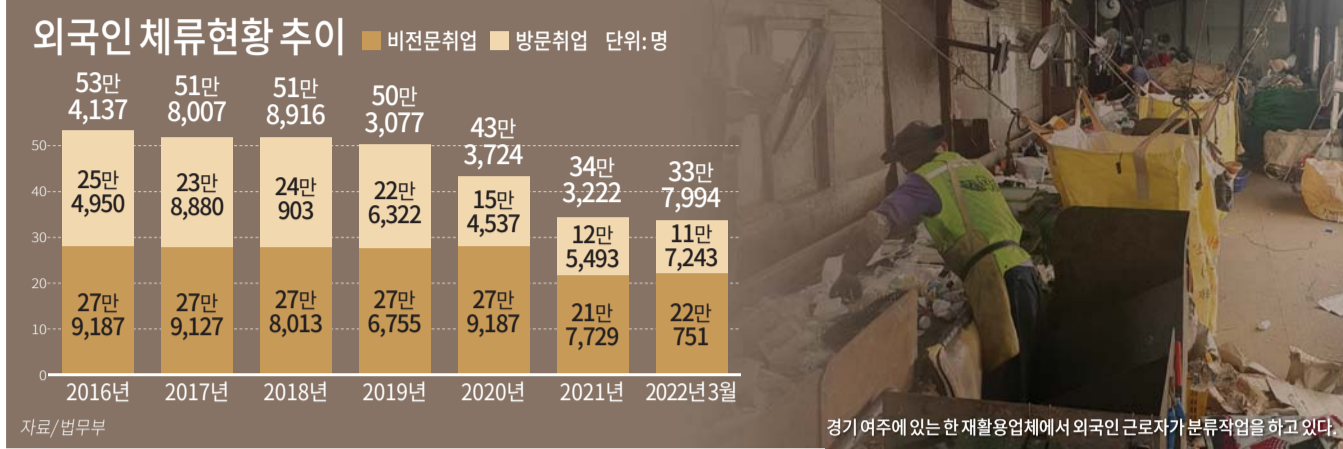
비전문인력은 2019년까지 50만명 수준을 유지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에 2021년엔 34만3222명으로 30만명 초반까지 크게 줄었다.

“비전문인력”은 E-9(비전문취업) 비자 취득 외국인과 중국, 구소련 등 외국국적동포(동포)에게 주는 H-2(방문취업) 비자 취득 동포를 더한 숫자다.

E-9은 일반고용허가제, H-2는 특례고용허가제로 구분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제조 현장에서 일하는 E-9 외국인은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22만751명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까지 27만명 이상을 유지했던 비전문취업 체류 외국인 역시 코로나19 영향으로 2021년부터는 20만명 초반까지 줄어든 상태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E-9 외국인력 도입쿼터는 7284명에 그쳤다. 반면 중소기업들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인원은 1만4083명이었다. 신청 인원의 절반 밖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쿼터로 제한한 것이다. 1분기엔 중소기업들이 1만816명을 신청했지만 도입쿼터는 2분기와 같았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 내놓은 ‘2021 하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들의 외국인력 미충원율은 2020년 3분기 당시 15.7%에서 2021년 3분기엔 24.7%로 크게 늘었다. 이는 채용을 목표로 한 외국인력 4명 중 1명을 채우지 못했다는 의

미다. 특히 기업 규모별 미충원율은 중소기업인 300인 미만인 26.9%로 300인 이상(3%)보다 9배 가량 높았다.

부족한 인원을 채우기 위해 ‘외국인력을 활용하겠다’는 답변도 300인 이상은 4.1%에 그쳤다. 반면 중소기업에 속하는 30~99인(13.3%), 10~29인(11.7%), 100~299인(9.7%), 5~9인(8.1%) 기업들은 외국인 의존도가 중견기업, 대기업보다 월등히 높다.

청년들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취업을 선호한다. 일자리를 찾는 중·장년층은 소위 힘들고(Difficult), 더럽고(Dir

ty), 위험한(Dangerous) ‘3D 업종’을 기피한다. 중소 제조 현장에서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하는 이유다.

중소기업의 내국인 취업 기피→인력난 심화→외국인력 의존도 증가가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300인 미만 규모 사업장에 이어 지난 7월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까지 확대 시행한 ‘주52시간제’는 가뜰이나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주52시간제 시행은 찬성한다. 하지만 경직된 제도 때문에 추가연장근로도 힘들고, 탄력근로

도 한계가 있어 인력 운용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게다가 외국인력도 쿼터로 막고 있어 채용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한국에서 기업을 하라는건지 말라는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속내를 털어냈다.

최저임금 급등도 외국인력을 많이 쓰는 중소기업들에겐 큰 부담이다. 외국인 의존도가 높은 영세 소기업일 수록 더욱 그렇다.

채용 초기엔 언어 등 소통에 한계가 있고, 일이 서툴러 내국인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현장에선 “이해할 수 없다”는 불멘 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고용허가제 쿼터운영 방식을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중소기업 현장의 숙련 외국인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들에 대한 문호도 과감히 넓혀야 한다”면서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다문화 사회로의 진행이 불가피하다. 이런 변화에 따라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등 관련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이창용 “韓-美 인플레이션 상황 달라... 금리 방향제시 시기상조”

〈한국은행 총재〉

이 총재,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회동
“금리차뿐만 아니라 성장률 변화 주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5월 기준금리 인상 액션과 관련해 시장에 어떤 시그널도 주고 있지 않다는 질의에 대해 “아직 금리 문제는 금통위원과 상의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드릴 말씀은 없다”라고 말했다.

16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조찬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다.

환율과 관련해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는 질의에 대해 추 부총리는 “외환시장의 안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중앙은행과 정부가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런 정도 수준의 서로 인식의 합의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후 첫 회동을 갖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평가와 한·미 기준금리 역전 우려에 대한 이야기도 진행했다.

이 총재는 “우선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려는 것은 누구나 다 예상하는 일이고 이미 적어도 두 차례 이상의

50베이스포인트(bp·1bp=0.01%포인트) 인상은 시장에 다 반영돼 있다. 그것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8%를 넘는 상황에서는 어느 경제학자든지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며 “우리 상황은 미국과 크게 다르다. 아직 인플

레이션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미국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과의 금리차만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종합적인 성장이라든지 우리나라 물가라든지 그런 걸 보고 금리 격차가 생기면 거기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체할 상황을 맞춰서 적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지금 50bp 이상을 고려할 수 있느냐는 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4월 상황까지 봤을 때는 고려할 필요는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물가가 그것을 고려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물가가 얼마나 더 올라갈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할 시점”이라며 “우리나라 물가 상승이 어떻게 변화할지 성장률이 어떻게 변화할 지를 조금 더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 1면 '추경-금리'서 계속

“거시경제 전반 점검 정책 신뢰성 높일 것”

한쪽에서는 돈을 풀고, 다른 한쪽에서는 금리를 올리면 재정 효과가 상쇄돼 물가 안정도, 경제 회복 효과도 미미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고환율 상황 관련 추 부총리는 “오늘도 외환시장의 안정이 필요하고, 앞으로 중앙은행과 정부가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는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환율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두 경제 수장은 “거시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중앙은행 간 원활한 소통을 기반으로 최적의 정책조합(Policy Mix)을 만들어 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정책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의 초석이 된다”고 강조했다.

부총리와 한은 총재는 앞으로 공식 회의체뿐 아니라 격의 없이 만나는 기회를 수시로 갖기로 했다.

두 수장은 1960년생으로 동갑으로 2008년 금융위원회에서 이 총재는 부위원장, 추 부총리는 금융정책국장으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청년주택 50만 가구 공급... 분양가 80% 대출 상품 검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현대판 주거신분제 타파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청년층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분양가의 80%까지 지원하는 대출 상품을 검토한다고 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난 정부에서 집값 급등으로 가장 고통받은 세대가 젊은 경제활동기간으로 인해 자산축적 기회가 부족했던 젊은 세대라고 생각한다”면서 “젊은 세대를 위해 전방위적 지원을 하

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우수 입지에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 사업모델과 대상지역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정부 출범 100일 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250만호 + α’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급계획은 지역별·유형별·연차별 상세 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이 될 것”이라며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해 집값 안정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말

했다. 원 장관은 또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해 분양가의 80%까지 지원하는 대출 상품도 함께 출시하겠다”며 “또 청년들의 청약 당첨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추첨제를 늘리는 등 청약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내집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는 청년 월세지원, 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청년 임대주택도 점차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취임식에서 원 장관은 서민·중산층의 주거를 안정시켜 ‘현대판 주거신분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취임식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국토교통부

를 타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5년간 주택 가격은 폭등했고 자산 격차는 커졌다. 부동산은 신분이 되었다”면서 “나와 가족이 사는 집이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타파하겠다”고 했다. /김대환 수습기자 kdh@